

한라포커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성과와 과제 (1)제도개선 사무·권한 이양

무늬만 '특별도'... 유명무실

총 7차례 제도개선 통해 4700여 건 중앙 사무·권한 이양
 도전역 면세화·외국인카지노 허가권... 정부 "절대 불가"
 행·재정적 우대 방안도 제자리... 제주 성장 한계 고착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정부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 적용 등을 통해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다. 오는 7월 1일 출범 15주년을 맞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과제를 4회에 걸쳐 게재한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 마련,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국제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의 책무뿐만 아니라 제주자치

도의 책무도 명시했다. 제주자치도는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고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자치도 조례를 제정·개정 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주특별법에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총 7단계에 걸쳐 4700여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제1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자치분권체계 정립을 위해 단일 광역체제 개편, 특별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감사위원회 신설 등의 1062건 제도개선이 이뤄졌고 2단계 278건, 3단계 관광3법 등 365건, 4단계 2134건, 5단계 698건, 2017년 시작한 제6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담은 미래비전의 핵심가치를 반영하는 자치기능 확대, 청정환경 보전, 개발의 건전성 제고 등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과제 123건의 제도 개선이 진행됐다.

2018년 이후 추진한 제7단계 제도

개선에는 개발사업 또는 각종 정책 추진 시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했다.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허용, 주민자치회 기능 확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감염병 발생 시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요청 권한 확보,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가족분노 액비 살포 기준 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 39개 과제에 대한 입법 예고가 이뤄진 상태이다. 앞으로 법제처 법안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제 세목 이양이나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재정적 우대 방안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 전역 면세화와 외국인카지노 허가권 이양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운영비는 지난 2012년 1869억원에서 2019년 1273억원으로 연평균 3.2% 감소하면서 제주도의 재정압박을 가속시키고 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개선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경제자유구역(8개)이 탄생하면서 제주만의 매력은 사라지고 있다.

고대로그자



해바라기에 폭 빠진 꿀벌 20일 제주시 애월읍 향동유적지에 활짝 핀 해바라기에 꿀벌들이 날아들어 꿀을 따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형 거리두기 열흘 더 연장”

도, 오는 30일까지 현행 2단계 유지
 “코로나19 확산 위험요인 여전 상존”

현행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열흘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30일까지 열흘간 연장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 18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달 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날 정부가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자 이같이 기간을 재조정했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지만 확실한 안정세로 보기엔 위험 요인이 상존해 있다는 점, 여름 휴가철

을 앞두고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행 유지 방침에 따라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 유지된다.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수칙 또한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도내 공공체육시설 역시 운영이 제한된다.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도내에서도 직계가족에 한해 예방 접종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된다. 예방 접종 백신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제외되는 예방 접종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도는 예방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제주지역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인 상황이지만 모임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강다혜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1년 더”

2022년 6월 30일까지... 상설화 목소리 비등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제주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존속 기한이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제처가 공개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제주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는 제주지원단 구성과 운영

기간을 규정된 훈령의 효력을 기존 202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고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

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사무기구로 '제주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원단은 2006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조직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상설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지난 3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삭제해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상민기자

구만섭 행안부 정책기획관 제주도 행정부지사에 내정



구 정책기획관을 내정했으며 25일 취임할 예정이다.

구 행정부지사 내정자는 충청남도 서천 출신으로 1994

예전 총무처 근무를 시작으로 애플코리아 총영사관 영사, 행안부 장관실 비서실장, 국민대통

합위원회 기획정책국장,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부장, 제28대 충청남도 천안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이달 말 명예퇴직할 예정이다. 고대로그자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1233
 20일 17시 기준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

Sustainable Peace, Inclusive Prosperity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아파식 차차티와
전 태국 총리

케빈 러드
전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2016)

아비지트 배너지
MIT 경제학과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2019)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1
 FOR PEACE & PROSPERITY

2021. 06. 24.(목) ~ 26.(토) | 제주 해비치호텔 앤 리조트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소식

주최

주관

후원